처리비용 국고 비율 높이고 친환경부표사업 지원해야

해양쓰레기 없는 '전남 블루오션'
〈3〉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위한 제안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 70% 지원을
국가주관 해양환경교육 의무화해야
'반려해변제도' 시범 도입 예정
어구·부표 보증금제 2022년 추진

해남군은 오는 2025년까지 미세 플라스틱 알갱이를 발생시키는 등 해양쓰레기의 주범으로 지목돼온 스티로폼 부표를 해남 해역에서 없애기로 했다. 양식어장 부표를 모두 친환경 제품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해남군은 지난 2021년 기준 9,607ha(19만2140책)의 김양식장을 보유, 전국 2위의 물김 생산량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전국1호 유기수산물 인증을 획득한 '황산 지주식 김'은 1010ha의 김 양식장에서 스티로폼 부표, 활성처리제 등을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 물김을 생산하고 있다. 군은 고품질 물김 생산을 위해 김 어망 지원, 양식 기자재 공급 등 10여종 사업에 대해 6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지난 2015년부터 폐스티로폼 감용기 운영을 통해 128t(50여 만개)의 폐스티로폼을 감용 처리 및 재활용함으로써 해안가에 방치되는 폐스티로폼 수거 및 처리에도 앞장서고 있다.

전남은 긴 리아스식 해안선과 다도해 특성상 육상 및 외국 쓰레기가 다량 유입되고, 선박·장비 및 인력 접근이 어려운 지역이 상당수다. 증가하고 있는 해양쓰레기를 균특회계 및 지방비로 처리하고 있어 체계적인 사업 추진이 어렵고, 지방재정 역시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지난 2019년 해양쓰레기 10만8000t 중 정부가 1만2000t(10.9%), 지방자치단체가 9만7000t(89.1%)을 처리했으며, 지자체 처리량의 30% 이상인 3만2000t을 전남도가 처리했다.

지난해부터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 마스크, 음식 포장용기 등 일회용품 사용 증가로 육상에서 미처리된 쓰레기가 강 하구를 통해 바다로 유입되면서 해양쓰레기는 더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도 높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우선 해양쓰레기 처리비용 재원 및 지원 비율 상향을 요청하고 있다.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의 경우 국비 70%를 지원하고, 친환경부표 보급사업 처리비의 지원을 추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어업인들의 인식 개선을 위해 해양환경(해양쓰레기)의 중요성에 대한 국가 주관 해양환경 교육을 의무 편성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특정 해변을 기업, 단체 등이 자신의 반려동물처럼 아끼고 돌보는 지난해 9월 제주를 시작으로 '반려해변제도' 시범 도입에 나설 예정이다. 지난 1986년 미국 텍사스(Taxas)에서 해양쓰레기 문제에 대한 근원적이고 장기적인 대응 수단으로서 개발한 해변 입양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해 국내에 적합한 방식으로 재해석한 프로그램이다.

올해 제주 외 3곳을 추진하고, 오는 2023년까지 지역 코디네이터 확보 추이, 참여자 수, 지역 선호도 등을 고려해 매년 2~3곳을 추가한다는 방침이다. 시범사업이 진행중인 제주는 하이트진로(표선해변), 공무원연금공단(중문해변), 제주맥주(금릉해변) 등의 기업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

어구·부표 보증금제 역시 오는 2022년말부터 시범사업으로 추진한다. 어업인 등이 각 지역별 어구 집하장으로 폐어구를 반납하면 위탁기관에서 확인 후 보증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수국 신품종 6종 5만주
전남농기원, 농가 보급

전남도농업기술원(원장 박홍재)은 20일 "'2021년 수국 신품종 전시·평가회'를 나주시 산포에 위치한 농업기술원에서 오는 24일까지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18일부터 시작된 전시·평가회에는 농업인, 종묘업체, 화훼종사자 등이 육성한 '모닝스타' 등 6개 품종과 개발 단계에 있는 새로운 계통 20여종이 선보이고 있다.

전남도농업기술원은 지난 2014년부터 국산 수국 품종 개발과 농가 보급을 위한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국내 연구기관 최초로 6종의 신품종을 개발해 지난해부터 농가 보급을 시작했다. 올해는 약 5만주를 보급해 3ha에 재배될 예정이다.

개발된 신품종의 특성은 꽃이 피는 기간이 기존 품종에 비해 4개월 정도 길고 모양이 우수하다. 재배농가뿐만 아니라, 서울시에서 운영 중인 서울식물원 관람객으로부터 호평을 받았으며, 지난 2019년부터 매년 특별 전시 홍보 행사를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수국 신품종 전시·평가회 나주시 산포면 전남도농업기술원에서 오는 24일까지 진행되는 '2021년 수국 신품종 전시·평가회'에서 박홍재 원장을 비롯한 농업기술원 관계자들이 수국을 살펴보고 있다. 〈전남도농업기술원 제공〉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
광주시, 법률·시설입소 지원

광주시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성폭력상담소 3곳에서 의료·법률·보호시설 입소 등을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해당 성폭력상담소는 인구협회(062-673-1366), 광주여성장애인(062-654-1366), 광주여성민우회(062-521-1360)다.

광주시는 광주경찰청, 성폭력상담소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해 관련 대책을 마련해 추진 중이다.

지난해 3월 '여성폭력방지 기본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디지털 성폭력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실태 조사'를 했다.

청소년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청소년성문화센터 2곳에서 예방 교육을 하고 있다.

타인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거나 이를 유포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인터넷 등에 유포하면 3년 이상의 징역, 시청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전남도, 10조 예산시대 연다…추경 1조 2146억 편성

코로나 피해지원·지역경제회복 중점
시·도 통합 연구용역 예산 2억 포함

전남도는 20일 1조 2146억원 규모의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전남의 올해 예산 규모는 10조 4168억원으로 사상 첫 예산 10조원 시대를 열게 됐다.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도가 추경예산을 1조원 넘게 편성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집중호우 피해복구비 4862억원, 코로나19 대응 예산 865억원 등 국고보조사업이 늘었기 때문이다.

이번 추경예산은 코로나19로 어려운 도민의 생활 안정 지원과 침체한 지역경제 회복, 미래를 대비하는 성장동력 창출에 중점을 둬 전략적으로 재원을 배분했다. 지난해 말 도의회에서 사업비 2억원 전액이 삭감된 광주·전남 행정통합 연구용역 예산도 추경안에 반영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시도 통합 실익, 시도 공동 발전 전략 등을 연구하도록 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운영 30억원, 호우 재해 복구사업 4862억원,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 운용 73억원, 순천·강진의료원 기능 특성화 및 감염병 대응 53억원 등이다.

코로나19로 어려워진 도민을 위해 소규모 농가 및 어가 대상 바우처 지급 271억원, 일반택시기사 지원 30억원, 버스 운수종사자 지원 13억원도 편성했다. 생계가 곤란한 취약계층을 위한 한시 생계 지원 사업비 229억원, 코로나19 생활비 81억원 등 정부 4차 추경을 반영해 지원 사각지대를 최대한 없애려 했다.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중점을 뒀다. 희망근로 지원사업 100억원,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60억원, 전남 일자리 플랫폼 건립 10억원을 통해 일자리를 제공한다.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35억원, 소상공인 자금이자 지원 20억원도 편성했다.

지역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사업비도 편성했다. 도내 투자기업 지원사업 60억원, 국가 면역치료 플랫폼 구축 29억원, 전남관광플랫폼(J-TaaS) 구축 20억원 등이다. 경력단절 여성 경력이음바우처 지원 6억원, 섬 주민 천원 여객선 운임지원 3억 5000만원, 파크골프장 조성지원 6억원 등 주민의 삶의 질을 끌어올리는 사업비도 다수 반영했다.

농·축산·어민의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소득을 높이기 위해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 45억원, 유자·차·무화과 등 한파 피해 농작물 지원 10억원, 가금농가 방역시설 지원 6억원, 김 수출 물류비 지원 1억원 등이 편성됐다.

주요 증액사업은 지방도 정비 250억원, 하천기본계획 수립용역 10억원, 의병 유물 및 사료 구입 3억 5000만원, 제104회 전국체육대회 주경기장 신축지원 20억원, 2021년 김대중 평화회의 개최 7억원 등이다. 추경안은 오는 6월 1일부터 열릴 제353회 전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심의·의결을 거쳐 16일 확정될 예정이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광주 소규모 초·중학교
우유급식 무상지원 확대

광주시는 6월부터 지역 24개 소규모(전교생 50~100명) 초·중학교 학생에게 우유 무상급식 지원을 한다고 20일 밝혔다. 기존에는 초·중·고·특수학교 저소득층 가정 학생에게 우유 무상 급식이 이뤄졌다. 해당 학교는 저소득층을 비롯해 전교생에게 우유를 무상으로 지원하게 된다. 현재 3만3000여명이 지원을 받고 있고, 올해 1900여명이 추가 지원된다. 이에 따라 관련 예산은 한 해 국비와 시비 합쳐 30억원에서 32억원으로 늘어난다.

김현중 광주시 생명농업과장은 "우유 급식 지원 확대를 통해 학생들의 신체 발달과 건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